

文 “평화와 민주주의는 한 몸... 시들지 않게 가꿔야”

제31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

고문상징 장소 ‘남영동’에 민주인권기념관 조성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민주주의의 진전은 평화의 길을 넓히고 평화의 정착은 민주주의의 토대를 더욱 굳건히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31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평화는 민주주의와 한 몸”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고문을 통해 과거 국가폭력의 상징적 장소로 꼽혔던 ‘남영동 대공분실’ 자리에 민주인권기념관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민주인권기념관’은 아픈 역사를 기



6월 항쟁 31주년을 맞은 10일 오전 광주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5·18 구묘역) 이한열 열사 묘소에 이철성 경찰청장 이름이 적힌 추모화환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억하며 동시에 민주주의의 미래를 열어가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를 비롯해 공공기관, 인권단체, 고문피해자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이 공간을 함께 만들고 키워갈 수 있

도록 정부가 적극 돕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여야가 2001년 당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을 제정한 이후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도 추진해왔다. 최근엔 기념관 건립에 대한 지원도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잘 가꾸어야 한다. 조금만 소홀하면 금세 시들어 버리는 만큼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해야 한다”면서 “민주주의의 역사적 시간과 공간을 되살리는 일

은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6월 민주항쟁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도 되새겼다.

문 대통령은 “민주항쟁 승리로 우리가 직접 대통령을 뽑게 됐고,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를 구축하게 됐다”면서 “그러나 우리 사회 곳곳에선 여전히 새로운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등한 인간관계를 위한 가정과 학교에서의 민주주의는 모든 민주주의의 바탕이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고, 최저생활이 보장돼야 하며 성장의 과실은 공정하게 분배돼야 한다”며 “성별이나 장애로 인한 차별도 사라져야 하고 성평등이 실현될 때 민주주의는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울러 “민주주의는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얼굴로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마지막 주말유세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10일 오후 성북구 정릉시장에서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범중 기자



자유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가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대국민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10일 서울 잠실 새내역 사거리에서 손학규 선대위원장 등과 함께 거리공동유세를 하며 손을 번쩍 들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일상속 민주주의, 갈 길 멀어” ‘단일화 무산’된 김문수·안철수 난타전

박원순 6·10민주항쟁 기념식 참석 김문수 “후보 단일화 못 이뤄 죄송” 안철수 송파 잠실 일대 합동유세

지방선거 전 마지막 주말인 10일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광화문을 찾아 ‘더 나은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문수,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 등 야권은 거리유세에 집중하며 맹추격에 나섰다.

박원순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제31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하고, 광화문광장 지하 ‘광화문 광장과 함성’ 전시관을 관람했다.

박 후보는 관람 직전 기자들에게 “한편으로는 형식적이고 제도적인 민주주의는 많이 이룩했지만 실제 일상의 삶 속에서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또는 가정과 직장에서의 민주주의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지현 검사가 했던 성평등의 문제도 마찬가지로”라며 “6월 항쟁과 30년 후의 광화문광장에서의 촛불시위는 유럽에서의 6·8운동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

너무나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어떤 형식적인 민주주의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모든 민주주의, 평등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가야 할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남영동 대공분실의 민주인권기념관 조성 사업을 자신이 주장해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태일 열사 등 민주화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들의 유가족을 위해 작은 기념관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서울시 사전투표율이 19.1%를 기록한데 대해서는, 중앙과 지방 권력 모두 바꾸려는 국민의 의식이 반영됐다고 해석했다.

박 후보는 오후 성북구 정릉시장에서 이승로 구청장 후보와 유세에 나선 뒤, 대학로를 찾아 청년 길거리 토크도 진행했다.

반면 사전투표 전 단일화가 무산된 야권 후보들은 상대방을 찍으면 박 후보가 당선된다는 논리로 난타전을 이어갔다.

김문수 후보는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를 찍으면 박원순 후보가 된다. 곧 분열

하고 소멸할 정당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 단일화의 열망을 이루지 못하고 선거를 치르게 돼 대단히 죄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제가 박원순 시장의 7년을 끝내고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시민 여러분의 간절한 바람에 대해 반드시 승리로 보답할 것”이라면서 “민주당의 일방독주를 견제할 것은 한국당 뿐”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는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에 총출동해 합동 유세를 벌였다.

특히 손학규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선대위원장인 박주선·유승민 공동대표, 김동철 원내대표, 안철수 후보와 서울 송파를 재선거에 출마한 박종진 후보가 함께 잠실의 한 냉면집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당의 ‘단합’을 강조했다.

안 후보 측 김철근 공보본부장은 논평을 내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가 ▲표를 분산시키고 ▲옛 경기지사가 미래를 이끌 수 없고 ▲선거 후 정계개편에만 관심 있고 ▲전문성도 없고 ▲보수의 내리막길을 자초한 세력임으로 물러서야 한다고 맹공을 폈다. /이범중 기자 joker@

남북 경협 기대감... 관련법안 봇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철도산업 등 3개 개정안 발의

북미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본격적인 경협 시대를 염두에 둔 관련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경협이 본격화할 경우를 대비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지만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을 논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그러나 여권이 무르익으면 경협을 위한 법적 뒷받침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들 법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지난 5일 남북 및 대륙철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3개 법률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은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과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 조정 사항에 ‘남북·대륙 철도의 연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정부가 남북 철도 경협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정부가 남북·대륙 철도의 연결을 위한 교류 협력을 촉진하게 하고, 해당 교류협력과 관련된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의 경우 국토부가 남북한 상호 건설기술의 협력 및 교류

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북한의 건설기술 관련 정책과 제도, 현황 등에 관한 조사·연구, 남북한 건설기술의 공동개발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정부가 남북한 건설산업 부문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같은 당 강훈식 의원은 4~5월 공공기관이 남북 협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무더기로 발의한 바 있다. 강 의원이 개정안을 마련한 법은 한국철도공사법, 한국도로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공항공사법, 한국감정원법, 국가공간정보기본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항만공사법, 한국환경공단법, 한국광물자원공사법, 한국전력공사법 등 11개에 달한다.

본격적인 남북경협 시대를 앞두고 남북 교류를 활성화하는 법안들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은 지난달 말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북한주민 접촉 신고 수리 규정을 명확히 하고 사후 신고가 가능한 사유를 확대하는 한편, 협력사업의 주체가 지자체를 명시하고 정부의 교류협력을 촉진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연합뉴스



분주한 선거종합상황실
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